

◎채소가격안정제, 스마트농업확대, 식품안전강화...농식품부 신년업무보고

- 청년 창업농 1200명 선발 정착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일자리 3만3000개 창출
- 스마트팜 보육센터 설립 현재 4000ha 규모에서 2022년까지 7000ha
-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높여 경영안전망 확충
- 농지연금 농업인 혜택 확대,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마련
-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 강화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올해부터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확대 추진한다.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을 체결 면적조절 및 가격 하락 손실을 보전 받는 방식, 평년가격의 80% 가격 보장,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등
- ◎스마트 농업 확산=스마트팜 보육센터' 설립 창업 예비인력 양성, 임대형스마트팜등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스마트팜 보급목표는 4000ha에서 2022년까지 7000ha
- ◎재해복구지원 강화=재해 피해농가의 실질적 영농재개를 위한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 ◎농지연금=고령농의 수요 반영 신규상품 3종 상품 출시월 지급금액도 소폭 상향
-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 강화
  - 오염 우려 농경지 중금속 잔류조사 확대, 수질악화된 저수지 정화('18년: 252억원)
  - 농약이력관리제 도입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준비, \*모든 농약 판매시 바코드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연계 관리
  -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 :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 강화,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

## 2018년 달라지는 농산업분야 주요 제도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업법인 청년취업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2.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준 단가인상
    - ① 직불금 단가 인상(만원/ha) : 논 +10,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 ②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 가능
4.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6.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7. 해외농업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8. 육묘업 등록제 시행
9.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10.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100억원 투입,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 설립 수목진료를 할수 있는 나무의사 신고제 도입

###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1월17일부터 시행

농수축산물 선물상한액 5만→10만원... 벌써 한우 2kg에 9만9천원짜리 선물나와... 설대목 농축산물소비증가 기대  
-착한선물스티커 부착 공직자에게 선물가능 문구-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 농축수산물과 원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식품에 한해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벌써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0만원이하 선물에부착하는 '착한선물'스티커에는 '공직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원이하 선물이 가능'표시

###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방향상반기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입, 공익적 기능제고, 친환경농업전문교육기관 육성
- 친환경인증제도개편 :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상습위반농가 영구퇴출, 인력기준강화
- 농산물 비의도적 농약검출시 처벌기준 완화시행(중전)취소→(1차)시정명령 (2차)취소
- 농관원, 표시·광고가이드라인 시행('17.12.11) \*한친농 광고표시자율기준 마련(12.12) 공시서 기재 사항만 표시광고 => 공시서외 허용원료 과학적근거·출처 명시광고
- 한친농 건의 : 대표작물별 표시제 도입, 비의도적 농약검출시 처벌완화 건의

### ● 비료관리법 개정예정

- 모든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강화 등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2월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임. 동법 시행령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위임한 비료품질관리사무를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할 예정(법 제26조 위임조항)

### ● 비료공정규격중 아주까리박 리신기준 신설 4월부터 시행

- 문제점 : 농진청은 비료공정규격 설정연구, 농관원은 품질검사시 시료발취 및 단속할 경우 전문성결여 및 이원화 중복규제 문제발생→ 각사별 각계요로에 진정
- 농진청에 리신기준 문제점 건의결과 "개" 리신독성검사 성적이 필요하다는 의견 → 4월이전 재논의 관련업계 대정부건의 필요

**◎식약처해체.....농민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식의약처 부처이기주의 문제 심각-**

식약처, 생산단계 안전관리업무까지 흡수계획 드러나  
농진청·검역본부 업무 이관, 농관원 아예 흡수 가능성



**-농식품부의 비료품질관리사무 농진청=>농관원 이관문제도 부처이기주의 사례**

- 한농연이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농식품 안전관리 흡수·통합 추진 계획을 규탄하는 동시에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 신설 등을 요구했다.식의약처가 작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 해체·식의약처장 사퇴'를 외치면서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치해 달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 반면 농식품부는 계류중인 비료관리법을 개정 비료품질관리사무를 전문성 및 이원화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어 이것 또한 산하기관 육성차원의 부처이기주의 전형적 사례다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문제와 개선점**

**EPR 제도는 2003년 제정당시에는 부과벌칙조항 없었으나  
2014년부터 하위규정에 부과기준 삽입 분담금부과  
재활용분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공론화 과정 거쳐 개선**



- EPR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다 생산자는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비료업체들은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있다. 농경연이 2015년에 실시한 '농가당 폐영농플라스틱 발생량과 미수거량' 농민조사결과 호당 연간 폐영농플라스틱 발생량 920 kg 중 1.2kg을 제외한 전량이 발생단계에서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료포장재에 부과된 재활용 분담금은 kg당 146원으로 분담금 비율이 28%나 된다고 한다.
- 저가인 유기질비료의 경우 재활용 분담금은 더욱 큰 부담이 된다. 연 매출액 10억원 또는 포장재의 연간 출고량 4톤의 면제기준도 불합리하다. 2003년 법 제정당시 부처간 의견조해도 없었고 이런 부담을 준다는 내용도 입법예고하지 않아 하자있는 법 제정인 것이다. 환경부는 10년동안이나 분담금부과 규정미비로 적용 못하였다가 은근슬쩍 하위규정에 삽입, 2014년부터 농산업계로 확대 시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더욱이 관련단체 임원을 환경부에서 낙하산으로 나가고 있어 더욱 부당하다. 농산업계가 힘을 모아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농산업체, 정부(농식품부, 농진청등) R&D 사업 참여확대**

**-올 15% =>20년 22%로 확대, 농업인·농산업체의 R&D참여 확대지원**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지난 12일 농업인(법인)·농산업체 등 민간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 올 15%=>20년 22%로 확대, 농업인·농산업체의 R&D참여 확대지원

● **농협, 주요 농기자재 가격 인하...367억원 영농비 절감 효과?**  
-비료 2.1% · 농약1.2%... 업계 공장가동을 땀에 울며겨자먹기식 입찰참여

◎최근 농약과 비료 등에 쓰이는 국제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생산원가 상승,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영농자재 가격 인상이 크게 우려됐다"면서 "이에 농협은 1131개 농·축협의 공동구매 참여로 물량을 결집하고,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메리트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료 농약 등 업계는 원재 및 부자재 중국산 등 수입가격이 20~70% 올랐음에도 공장을 놀릴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농협계통 계약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저입찰가격제가 요망되는 시점임에도 농협은 외부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차제에 농협중심의 농자재 유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비료 계통구매가격 인하...만성 적자**

EPR제도·양분총량제 도입 등도 업계부담 가중 요인

◎ 비료시장은 기회적 요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암울한 분위기다. 무기질비료의 경우 사용량 감소가 지속되고, 올해 요소 수입가격은 지난해 대비 원달러 환율의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한 환경관련 규제 강화등과 맞물려 계통구매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로 업계의 적자가 만성화되어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올해도 계통구매가격이 평균 2.1%가 인하돼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EPR제도, 양분총량제 도입도 업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유기질비료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해 1600억원을 지원해오던 정부 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PLS 시급성 때문에 10% 줄어든 1440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퇴비 등의 과도한 사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가 하면 이와 관련 함량표시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올해는 규제 강화도 예상되고 있다(1월8일자 농어민신문기사발체)

● **농식품부, 농약안전관리 강화한다**

농약이력관리시스템구축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전 농약)=농약관리법 개정

◎ 농약이력관리시스템구축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이 현재 9종에서 모든 농약 판매시 판매기록 의무화하되, 바코드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 관리한다.

◎ 농약 판매 관리 강화 : 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라 재배작목 확인후 적합농약만 판매 가능

◎ 농약판매인 자격요건을 농약.병해충방제 경력자격소지자로 한정, 협회운영교육=>농진청이관

◎ PLS 도입을 준비를 위한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확대

● **2020년부터 배 지베렐린 사용 없기로...과다사용 품질저하 소비부진 초래  
청와대서 배산업발전대책위 개최 결의...청와대가 일없어 농약도 관리하나 여론?**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2 2층 회의실에서는 청와대 농업비서관 주최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관계자 및 주산지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산업 발전 대책 협의회'가 개최됐다. 배산업 발전관련 가장 큰 현안으로 추석 전에 지베렐린 과다사용으로 품질이 저하돼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지베렐린 사용을 계속 줄여 가면서 2020년부터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기로 생산단체장과 농협도 동의 했다"고 밝혔다.

● **올 12월 전면시행 PLS 제도....준비 덜 됐는데 누구를 위해 졸속 시행하나**  
 - **농식품부, 소면적작물용 농약 직권등록 확대, 부적합농산물조치(SOP)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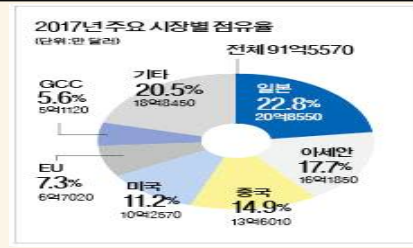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PLS 제도 전면시행을 1년 앞둔 '2018년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 노령자교육, 콜센터운영을 강화한다  
 ○ 또한 농약안전사용 캠페인실시, 농산물 및 농약관리인 유통·판매인교육과 관련기관별 모의훈련 실시 도출문제점을 분석 부적합농산물조치행동요령(SOP)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러나 농촌현장 실정은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 60세이상 고령자가 65%인 실정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소면적작물 직권등록을 강화한다지만 기존 소면적 작물수만 89종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등록농약이 거의 없는 국내도입 열대작물만도 42종에 달한다. 이를 유기질비료 지원예산까지 삭감, 확보한 증액예산으로 수행한다지만 반수 작물정도밖에 커버를 못할 것이 예상된다. 언제는 농약안전사용교육 강화 안했나? 노령농 영세농가나 특수재배 소면적작물 잔류농약 검출파동이 눈에 선하다.

○ 원래 국내 PLS 도입배경은 일본 등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에는 PLS를 엄격히 적용받고, 국내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관리는 느슨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국내 농산물위주로 전면 적용함에 따라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금이라도 CODEX에 시행연기를 통보하고, 현행처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잔류농약 문제가 거의 해소될 때 전면 시행함이 옳다고 본다

● **작년 농식품수출 68억 2870만불...5.6% 증가**

- 중국 : 사드 후폭풍으로 작년보다 10% 감소 9억8700만불
- 베트남(1억불), 태국(32.8%), 프랑스(32.5%), 대만(40.5%)증
- 딸기 : 동남아시아에서 각광 29% 증가한 4400만불
- 김 : 일본·중국·미국, 러시아·캐나다·호주 등 5억불



○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57억3260만불, 신선 농산물은 전년대비 1.2% 줄어든 10억9610만불로 저조한 실적 -딸기(23.9%), 포도(28.7%), 파프리카(15.1%), 인삼류(10.1%), 새송이버섯(10.0%), 팽이버섯(13.6%) 등이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 일본과 아세안 시장에서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각각 13.4%, 9.3% 증가 미국(7억4600만불) 4.2% 증가, EU도 새송이버섯(12.4%), 김치(26.1%), 라면(12.2%) 등 상승세로 2016년 보다 9.0% 늘어난 4억6100만불. GCC(걸프협력회의)국가도 9.9%증가 5억800만불이다.

● **농식품R&BD 지원사업 설명회**

**190개 내외 업체 120억원 지원 예정**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농자재 수출 판로도 지원**



실용화재단은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 금강홀에서 200여명의 농산업체 관계자들과 '2018년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지원사업 △기술금융 △농식품농자재 수출 및 판로지원 △농생명 융합기술 상용화 △농기계 검정서비스 △종자종묘 보급 및 육종기술 지원 등 8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 ● 농축산식품 미생물 정책보고회

축산 약취 등 현장 문제 미생물 활용방안, 환경친화형 농자재, 전통 발효식품 미생물 연관 산업 발전방안 논의



○ 1.10(수),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축산식품미생물 정책보고회」를 개최 미생물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축산 약취 등 현장 문제에 대해 미생물을 활용 방안 탐색, 환경친화형 농자재, 전통 발효식품 등 미생물 연관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해외 단신]

### 지난해 과일수입 '역대최대'

품목 가릴 것 없이 연중 수입, 제철 과일 직접 경쟁 불가피  
바나나>오렌지> 파인애플>포도>키위>체리> 라임> 망고 순



관세청은 2017년 수입 과일규모는 13억7257만불로 확인했다. 물량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바나나가 43만7380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됐고, 1만톤 이상 수입된 품목을 보면 오렌지(14만1572톤), 파인애플(7만8998톤), 포도(5만5934톤), 키위(2만8147톤), 체리(1만7661톤), 라임(1만5633톤), 망고(1만3426톤) 등 순이다. 품목 가릴 것 없이 연중 수입됨에 따라, 제철 국내산 과일과 직접 경쟁 불가피하게 됐다

## ● FAO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69.8포인트 큰폭 하락

- '17.7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하락 전환 (전월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0.3%↓)
- (안정) 곡물 / (하락) 유제품유지류설탕육류

\* 식량가격지수추이 : ('17.9월)178.6→(10월)176.5→(11월)175.6→(12월)169.8

- '17년 평균 식량가격지수는 '16년보다는 8.2% 상승한 174.6포인트를 기록. 최고치를 보였던 '11년보다는 24% 낮은 수준이나 '14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지수이다.

\* ('14년 평균)201.8 → ('15년)164.0 → ('16년)161.5 → ('17년)174.6

- '17년 설탕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지만, 유제품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육류, 곡물 및 유지류 가격은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 [농진청 고위공무원단 인사]

- 차장
- 국립농업과학원장
- 국립식량과학원장
- 국립축산과학원장
- 기획조정관
-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 농업환경부장
- 농업공학부장

- 이규성(李圭錕)
- 이용범(李龍範)
- 김두호(金斗鎬)
- 양창범
- 최동순(崔東淳)
- 한귀정(韓貴貞)
- 윤중철(尹鍾轍)
- 이승기(李承奇)